

제1장 토론문

1. '평화로운 접경지역'이 반드시 '경계가 약한 접경지역'과 같은 의미인가?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통제와 제도가 정교해지며, 탈경계화는 경계의 소멸이 아니라 기능적 재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국경의 개방은 반드시 국가 권력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유연하고 미시적인 통제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진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유럽의 쎅겐 지역과 같이 국경의 개방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거의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그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동의 관리를 위한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CCTV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감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디지털 감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가시적 경계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로운 접경지역'을 물리적 충돌이 부재한 공간이나 경계가 약화된 공간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역이야말로 이동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경학적 목적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지정학적 안보 논리가 결합한 '안보-경제 연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초국경 협력공간의 지속성을 무엇이 보장하는가?

초국경 협력공간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려면 다층적인 제도적·경제적 연결을 형성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는 서구의 접경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주의적 연결과 다층적 거버넌스적 특징에 기반해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현실, 특히 북한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의 로컬 협력이 거시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체제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비국가 행위자의 자율성이 전무한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를 지녔다는 점이다. 서구의 초국경 협력은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의 단계에서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맺으며 중앙정부의 거시정치의 영향력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면, 북한에서 국경을 넘는 모든 인적, 물적 교류는 철저히 당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아무리 일상적인 접촉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내부의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이어질 수 없었기에 거시정치적 결정 하나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제재 체제 역시 탈경계화를 제약한다. 북한의 핵무장 및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접경지역 내 자본과 물자의 이동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접경공간에서의 일상적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화를 담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가 내부를 넘어 국제사회의 거시정치에 의해서도 한계가 지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초국경 협력공간의 지속성은 이러한 거시정치의 틀 안에서 규정되는 종속적 결과물일 뿐, 거시정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3. 네트워크의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

남북 철도와 도로가 대륙 네트워크로 연결된다고 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발제자의 주장과, 그 주변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물류 체제가 교차하는 국경의 특성상 통관, 검역, 환적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접경지역은 화물 이동의 속도가 변화하는 결절점(node)로 재편될 것이며, 이러한 재편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의 발전은 지역 거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어느정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접경지역이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된다는 사실이 곧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발제자의 주장에도 동의한다. 국경 통제 완화로 창출된 새로운 이동성과 물류 거점화의 경제적 이득은 인프라를 장악한 거대 물류 자본이 독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 자본 유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형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과 환경 파괴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오롯이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결절점이 지역 경제와 결합되지 못한다면, 접경지역은 거대 자본만을 위해 복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발제자의 향후 포스트 영토주의적 연구는 중심과 주변, 이익과 부담의 공간적 배분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공간적 정의를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